

풍력발전소에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일본환경성은 2012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풍력발전소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발전소를 관리·감독하는 경제산업성(원자력안전보안원)이 담당. 우리나라도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의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제도·정책수립에 참고가 될 것임

- 일본 환경성은 풍력발전소를 환경영향평가법의 대상에 추가할 방침으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2011년 9월 하순 각의 결정하여 2012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함
 - 환경성은 총출력이 1만kW이상인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 소음이나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지자체 및 중앙정부에 보고 및 의견을 구함
 - 1만kW급은 매전사업으로 풍력발전을 영위할 경우 일반적인 규모이며, 수력발전의 경우에는 출력 3만kW이상, 화력발전의 경우에는 15만kW이상, 지열의 경우에는 1만kW이상 및 모든 원자력발전소는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임
 - 풍력발전소는 소음과 저주파음 및 버드스트라이크(새가 구조물에 충돌하는 사고) 등이 우려되고 있어, 지금까지는 독립행정법인 신에너지·산업기술융합개발기구(NEDO)에서 지침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정부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이용되고 있음.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등의 사례가 있어, 지난해 2월 중앙환경심의회는 법·제도의 대상사업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권고함

□ 환경영향평가 기간은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의견 수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의 조사항목 증가로 NEDO의 지침서에 비해 14개월 길어진 약 3년으로 설정

- 2012년 7월 도입 예정인 전량고정가격매입제도에 의해 재생 가능 에너지발전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어,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는 소음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풍력발전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음
- 그러나 NEDO 지침서에 기초한 환경영향평가 비용은 풍력발전소당 2천만 ~ 5천만엔이지만 환경성의 환경영향평가법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후쿠시마현의 사례에서 유추해 보면 환경영향평가에 약 1억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이에, 환경성은 환경영향평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차 효율화 및 예산지원 등을 검토중에 있음

□ 시사점

- 일본풍력발전협회 등의 관련단체에서는 중소기업자에게 불리하여 의무대상을 출력 3만kW이상의 대형발전소에 한정하도록 하는 요구도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면 오히려 풍력발전 보급·확대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환경성, 경제산업성 등 관계 부처간의 정책조율이 더 필요할 것임

- 우리나라의 풍력발전용량은 2009년도 현재 345MW로 세계 28위 수준이지만 2010년 11월에 지식경제부가 해상풍력 개발로드맵을 발표하는 등으로 풍력발전 관련 산업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
- 그러나 최근 풍력발전소 건설에 있어서 환경영향이 대두되어 정부의 에너지정책 목표에 환경적·사회적 이슈들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부처의 풍력발전시설의 환경평가제도 정책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임

자료 : 日経エコロジー(2011.9.26)